



평화나눔의 시선

2025.08.08. | 제25-03호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열어가길

새 정부는 한반도 평화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6개월간 대한민국을 짓눌러왔던 정치적 혼란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리 내부에 깊게 파인 양극화와 정치적 이해 차이로 갈라진 우리 사회통합의 과제도 드러났다. 새 정부의 출범에는 한반도에 드리워진 갈등과 적대로 인한 평화의 위기를 완화하고 다시 평화의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도 담겨 있다. 특히 북한을 둘러싼 남남갈등과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돌아보고, 한반도 평화 재건을 위한 합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는 광복 80년이자 분단 80년의 뜻깊은 해이다. 너무나 오래 이어온 분단의 상처가 깊어서 이를 치유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데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천주교회는 40년 전 북한선교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설립되어 30년 동안 남북 간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와 실천을 지속하였음에도, 근래의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출범한 새 정부는 80년의 분단을 넘어 민족화해와 평화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집중할 때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2023년 말부터 본격화된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따라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증폭되었다. 학교 현장에서조차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안보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져 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북한이 핵 개발과 군사적 수단에 과도하게 치중하면서 우리를 대결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거 미국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배신감과,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북 적대 정책이 이를 고착화했다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위태로운 갈등과 긴장 상황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평화 회복에 강한 기대와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변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라고 밝혔다.¹⁾ 우리 교회에서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많아도 넘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평화의 장인들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길들을 협상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²⁾라고 말씀하셨다. 올해 5월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되신 레오 14세 교황님은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라는 첫 인사 말씀을 하셨다. 가톨릭교회는 폭력과 갈등을 없애고 평화를 만들라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의 여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끌어내고 이를 진전시킬 묘책도 당장은 없어 보인다.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인정하고 마주 앉을 가능성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예상하건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고 북한 문제에 다시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때 북-미 간 핵 협상

1)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2025.6.54)>(발췌)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변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2) 『모든 형제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pp. 157-161.

이 열릴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과 남북 간의 의미 있는 접촉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그때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당장이라도 인도적 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겨 신뢰를 착실히 쌓아야만 한다. 우선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연락 채널과 군사합의 복원 등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단된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교류 협력 재개를 위한 각종 기반을 정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당면하여 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관한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다행히도 새 정부는 전방에서의 대북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신속한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접경지대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긴장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9.19 군사 분야 합의의 이행 재개와 동시에 우리 독자 제재의 일부 해제를 선언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초보적인 신뢰 구축이 성공하면 근본적인 안보 딜레마 해소를 위한 비핵화와 단계적 군축으로도 나아갈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단호하고 일관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과감하고 일관되게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 간에 필요한 진정한 화해³⁾는 서로의 잘못과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진정한 화해의 과정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교류 협력에서 성과를 내고자 서둘렀던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한 주민 모두를 위한 일관된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길

새 정부가 밝힌 대북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 간 신뢰 회복,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증진, 사회문화 공동체 회복 등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 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북한에서도 장마당 세대의 개방적 인식이 더 커지고, 무역 및 제조업 등에서 결국 남북협력의 수요가 커질 것이다. 이 상황에 대비하여 남북협력

3) 『모든 형제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p. 160. “참다운 화해는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는 욕망보다는 다른 이들에 대한 봉사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를 형성할 때’ 실제로 성취됩니다.”

추진과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도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과 민족·통일 삭제 등 대남 통일정책의 전환이 역설적으로 우리 내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민족과 통일 담론을 다시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민족’ 담론은 ‘통일’ 필요성의 현실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늘어나는 다문화와 이주민 등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는 ‘혈연’ 중심의 폐쇄적 민족 개념에 비판적이며, ‘문화와 가치’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열린 민족주의’ 등 개방적 민족 개념을 선호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도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⁴⁾’를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서독 관계에서도 기본조약에서 일부 2국가 형식을 인정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평화통일을 이루었듯이, 한국도 어느 정도의 전략적 유연성은 발휘하되 확고한 통일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가운데 ‘적대성’을 완화하고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는 실질적 방안의 중점을 두자는 견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통일을 장기적인 ‘일련의 평화적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30년 이상 유지해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사회적 대화를 거쳐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종교, 시민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길

현재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전면 재개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으로 인해 점진적 접근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행히 남북 간에는 민간이 오랫동안 큰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한 경험도 소중하다. 남북관계 상황이 어려울수록 대북 접촉과 교류에서 당국만 앞서 우지 말고 종교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 관련 정보와 언론 등을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다양한 시민사회 등 민간의 대북 접촉과 교류의 문호를 폭넓게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4) 1991년 12월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임을 합의하였다.

북한이 강경한 대남 태도를 보이고 군사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종교인을 비롯한 민간의 선도적이고 역할과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 천주교회도 한반도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중재자, 협력과 번영의 마중물이 되려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등 강경한 주장도 결국에는 남북 간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간교류를 막는 근본적 장애물이 되지 못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우리 사회는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북한 주민의 삶과 그들의 생각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형제애에 기초한 연대 의식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⁵⁾’가 절실하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오랜 분열과 증오를 거두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기를 고대하고 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한반도에서 열린다.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님을 모시고⁶⁾ 전 세계 청년들이 한반도에서 인류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오랜 전쟁의 위험과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세계평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가는 여정에 의미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새 정부는 한반도와 주변의 모든 주민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잘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대전환의 여정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우리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끝>

5) 1989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4차 세계성체대회의 주제, 1984년 이후 두 번째로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0월 8일 개막식에서 “분열 극복을 통하여 참평화 실현하자”는 제목으로 강론을 하셨다.

6) 『경향신문』, 2025년 7월 7일,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하고 “2027 WYD에 오시는 길에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특별한 기여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유 추기경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황청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